



#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이 덕 난 · 유 지 연

- 01 I. 들어가며
- 02 II. 202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분석
- 05 III. 사교육비 변화 추이 및 시사점
- 13 IV. 주요 쟁점
- 24 V. 개선과제

## 요 약

### □ 초·중·고교 사교육비조사 결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 등이 크게 증가함

-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임

### □ 사교육비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② 사교육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 ③ 사교육 의존도 심화, ④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 변화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반영 미흡 등이 제기됨

### □ 사교육비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실용적인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차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별도의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초등학교 사교육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의 참여율 및 질 제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EBS 수능 연계 비율 복원 등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크다고 인식되는 교육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I. 들어가며

지난 3월 11일에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sup>1)</sup>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 4천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조 1천억 원(21.0%)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 비해서도 2조 4천억 원(11.5%)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1년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2020년 대비 12.5% 증가하였다.

이번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대해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했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학원의 휴원과 감염 우려 등으로 사교육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원격수업의 질과 학습결손 등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sup>2)</sup>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을 통한 학습결손 예방 및 교과보충 등 교육회복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사교육비 급증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전의 학교로 회복되기도 쉽지 않지만,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전과 다른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난 수년 동안의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부의 사교육비 대응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21년 초·중·고교 사교육비조사 결과와 2007년 이후 사교육비 변화 추이를 조사·분석하고, 이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검토하며, 향후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차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및 관련 교육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1) 사교육비 조사항목에는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 지출 비용이 포함됨. 사교육비 금액은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명목 금액임

2) 김지현, 「코로나 탓 더 커진 ‘사교육 의존’… ‘학원 간 아이 위치 실시간 확인」, 『헤럴드경제』, 2021.2.12.; 이도연, 「학부모 76.8%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의존 커져”」, 『연합뉴스』, 2021.10.4.

## II. 202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분석

### 1. ‘초·중·고사교육비조사’의 개요

현행 법률에서는 ‘사교육’ 또는 ‘사교육비’에 대한 법률적 개념 정의를 찾기 어렵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이라 한다) 제7조<sup>3)</sup>가 ‘사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개념을 정의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연구 및 언론보도 등에서는 ‘사교육’ 또는 ‘사교육비’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의된 개념 정의는 찾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교육부 공동 사교육비조사에서 사용되는 ‘사교육비’의 정의를 사용하고 자 한다. 이 조사에서는 ‘사교육비’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제시하였다.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정통계로 작성되고 있다. 통계청과 교육부는 「통계법」 제18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통계청고시) 및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초중고사교육비조사)」(통계청고시)에 따라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사교육비조사는 2007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표 1 | 2021년 초·중·고교 사교육비조사의 개요

근거 법령	「통계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정통계
추진연혁	2007년부터 통계청과 교육부 공동조사
조사규모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약 3,000개 학교 학생 약 74,000명
조사대상기간	매년 3~5월(5~6월 조사), 7~9월(9~10월 조사)
조사방법	인터넷(모바일 포함) 및 서면 조사
조사내용	사교육비 조사항목: 교과별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 강좌비 등 ※ 관련 교육비 조사항목(방과후학교 비용, 어학연수비, EBS 교재비 등)은 별도로 제시되고, 이 항목들은 사교육비에 포함하지 않음

※ 주: 사교육비 금액은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명목 금액임

※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2022.3.11.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사교육비에는 개인 및 그룹과의, 학원, 방문학습지,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 지출 비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EBS 교재비, 진로진학학습상담비, 방과후학교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조사된다. 2022년에 발표된 지난 2021년 조사는 전국 초·중·고교의 약 3,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개요는 위의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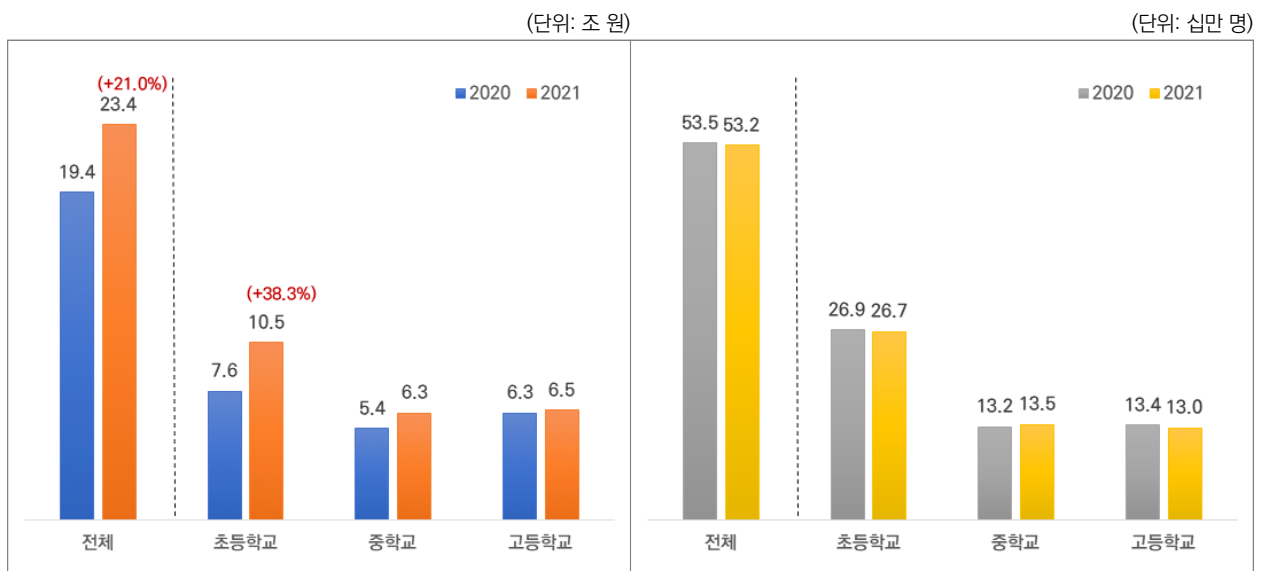
## 2. 2021년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내용

### 가. 전체학생 및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2021년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 4천억 원으로 2020년(19조 4천억 원) 대비 21.0%(4조 1천억 원) 증가하였다. 2021년 초·중·고교 전체 학생수는 532만 명으로 2020년(535만 명)에 비해 약 3만 명 감소하였으나,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10조 5천억 원, 중학교는 6조 3천억 원, 고등학교는 6조 5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초(38.3%), 중(17.7%), 고(3.0%)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 | 2021년 사교육비 총액 및 전년 대비 증가율 | 그림 2 | 2020년 및 2021년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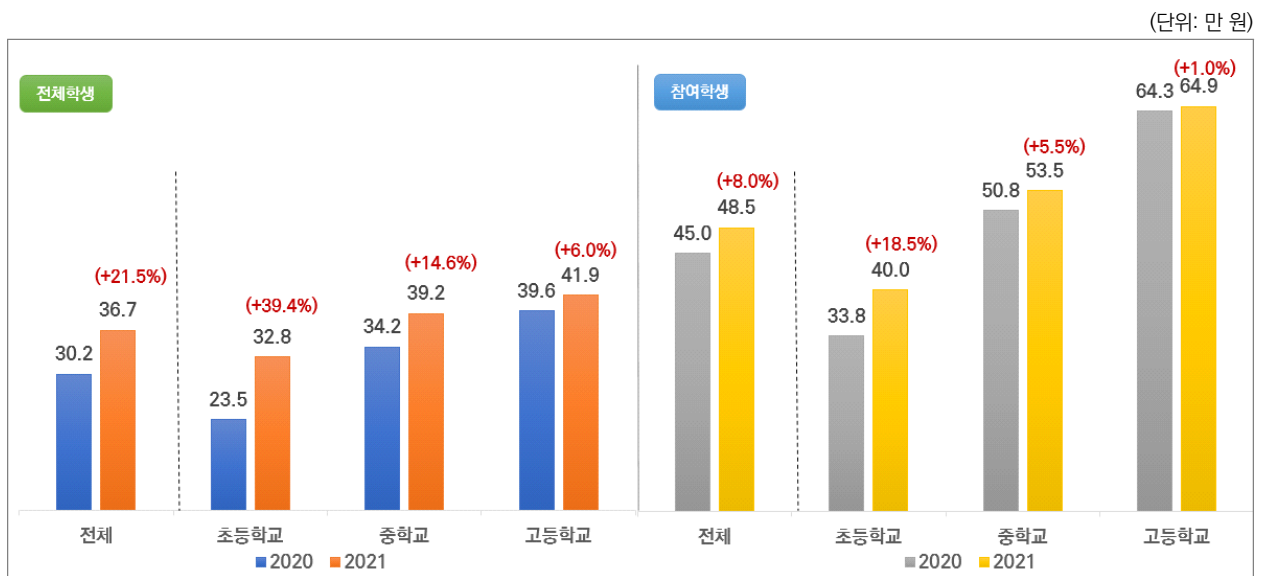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2.3.11.

## 나. 전체학생 및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에 36.7만 원으로 2020년(30.2만 원)에 비해 21.5%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3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4%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39.2만 원으로 14.6%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는 41.9만 원으로 6.0% 증가하였다. 전체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초등학교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에 48.5만 원으로 2020년(45만 원)에 비해 8.0%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53만 5천 원으로 5.5%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는 64만 9천 원으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초등학교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 그림 3 | 전체학생 및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20년 및 2021년)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2.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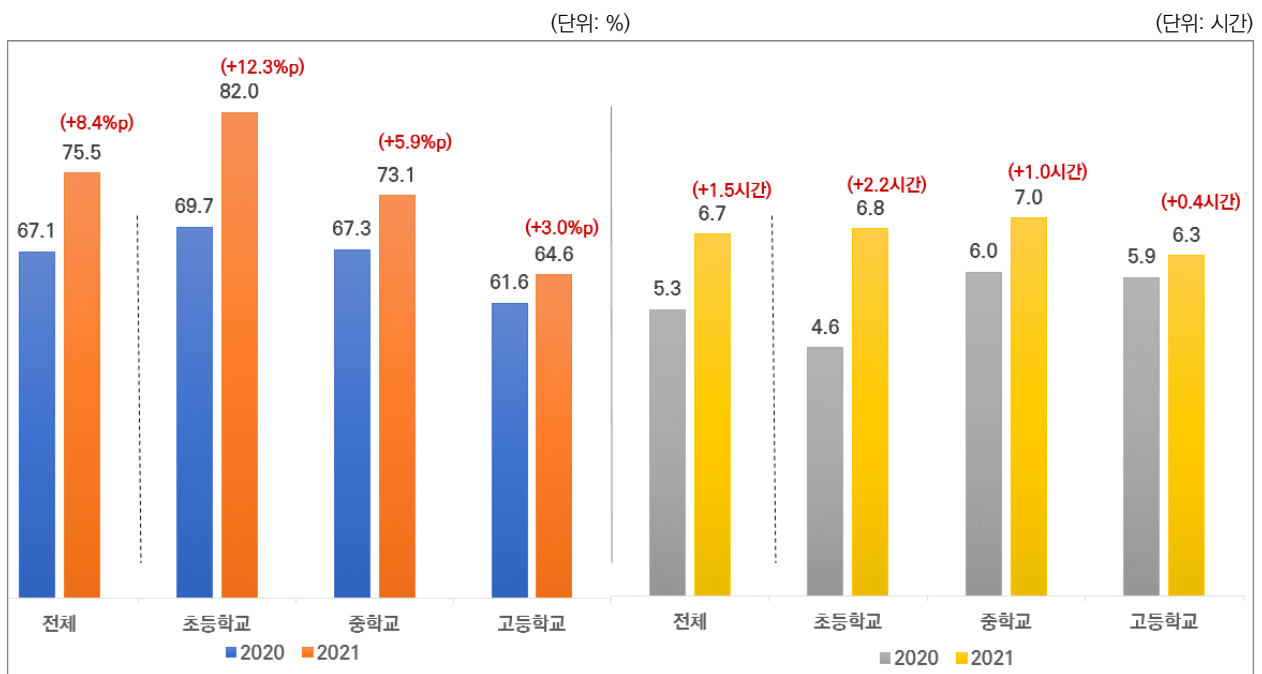
## 다.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참여시간

초·중·고교 사교육 참여율은 2021년에 75.5%로 2020년에 비해 8.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82.0%, 중학교는 73.1%, 고등학교는 64.6% 순으로 높았으며,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12.3%p, 중학교는 5.9%p, 고등학교는 3.0%p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사교육 참여율과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2021년에 6.7시간으로 2020년에 비해 1.5시간 증가하였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는 7.0시간, 초등학교는 6.8시간, 고등학교는 6.3시간 순으로 높았으며,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2.2시간, 중학교는 1.0시간, 고등학교는 0.4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에서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 그림 4 | 사교육 참여율(2020년 및 2021년)

| 그림 5 |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2020년 및 2021년)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2.3.11.

### Ⅲ. 사교육비 변화 추이 및 시사점

#### 1.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 및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 가.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 및 증감율

통계청·교육부의 초·중·고사교육비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사교육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에 20조 400억 원에서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 17조 8,346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 후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2021년은 23조 4,158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대폭 증가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표 2 | 전국 연도별 사교육비 변화추이(2007~2021년)

연도	전체				전년도 대비 증감률(%)			
	사교육비 총액 (억 원)	사교육 참여율(%)	참여학생 1인당월평균 사교육비(만 원)	전체학생 1인당월평균 사교육비(만 원)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참여학생 1인당월평균 사교육비	전체학생 1인당월평균 사교육비
2007	200,400	77.0	28.8	22.2	-	-	-	-
2008	209,095	75.1	31.0	23.3	4.3	-2.5	7.6	5.0
2009	216,259	75.0	32.3	24.2	3.4	-0.1	4.2	3.9
2010	208,718	73.6	32.7	24.0	-3.5	-1.9	1.2	-0.8
2011	201,266	71.7	33.5	24.0	-3.6	-2.6	2.5	0.0
2012	190,394	69.4	34.0	23.6	-5.4	-3.2	1.5	-1.7
2013	185,960	68.8	34.7	23.9	-2.3	-0.9	2.1	1.3
2014	182,297	68.6	35.2	24.2	-2.0	-0.3	1.4	1.3
2015	178,346	68.8	35.5	24.4	-2.2	0.3	0.9	0.8
2016	180,606	67.8	37.8	25.6	1.3	-1.5	6.5	4.9
2017	186,703	71.2	38.2	27.2	3.4	5.0	1.1	6.3
2018	194,852	72.8	39.9	29.1	4.4	2.3	4.5	7.0
2019	209,970	74.8	42.9	32.1	7.8	2.8	7.5	10.3
2020	193,532	67.1	40.5	30.2	-7.8	-10.3	-5.6	-5.9
2021	234,158	75.5	48.5	36.7	21.0	12.5	19.8	21.5

※ 주: 1) 전년도 사교육비를 다음 해에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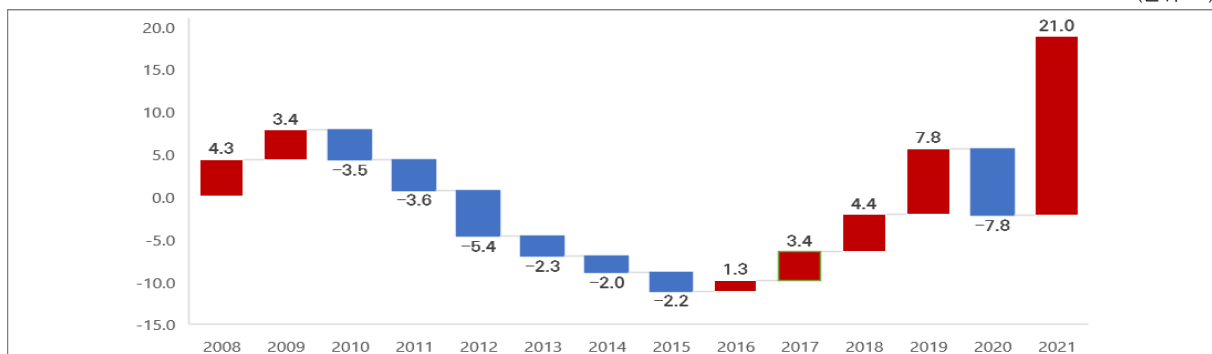
2) 200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2016년에 발표한 2015년 조사 결과부터 명칭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로 변경함

※ 자료: 교육부, 「2015~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2016~2022.; 교육부, 「2007~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7~2015.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교육비 총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2016년부터 2019년, 크게 증가한 2021년이 주목되는 시기이다. 전체적인 사교육비 총액의 증가 시기와 감소 시기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그림 6 |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의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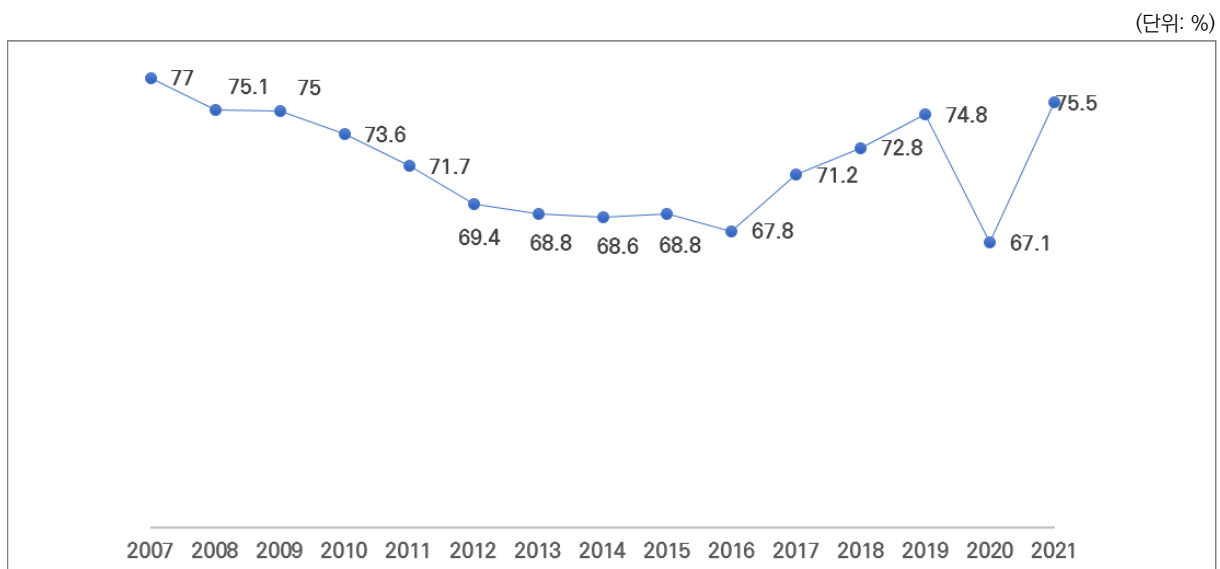




## 나. 사교육 참여율

연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에 77.0%에서 2014년에 68.6%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 68.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 후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2021년은 75.5%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도 증가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2007년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7 | 전국 사교육 참여율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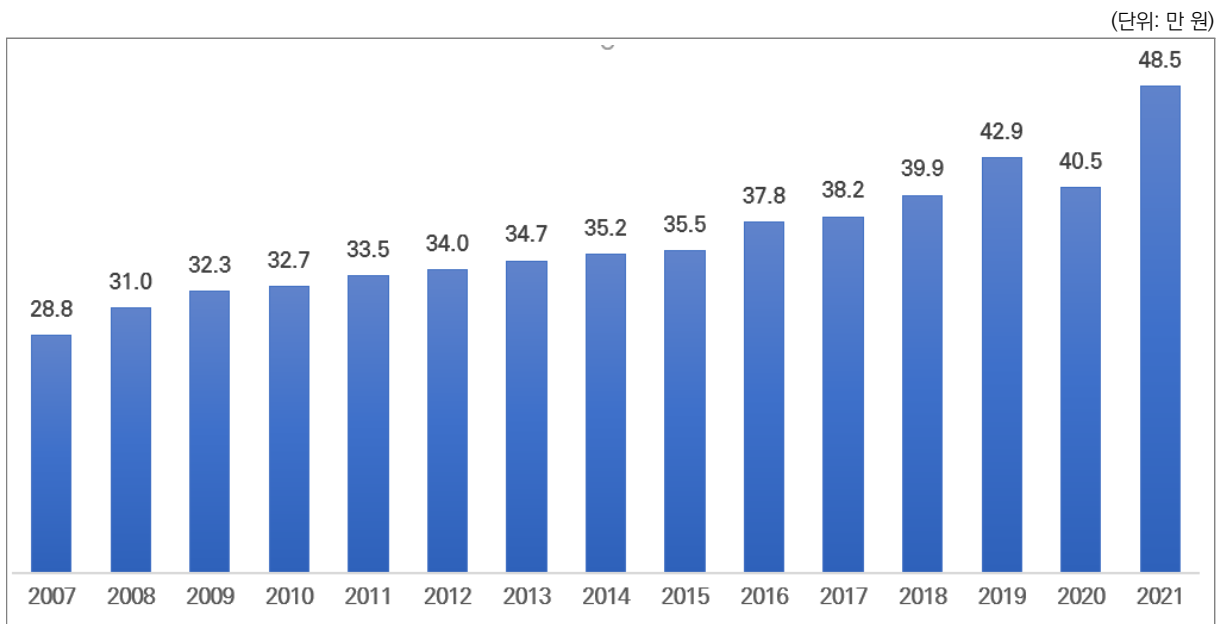


※ 자료: 교육부, 「2015~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2016~2022.; 교육부, 「2007~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7~2015를 그래프로 작성함

## 다.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에 28.8만 원에서 2019년에 42.9만 원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40.5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48.5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2.9만 원)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8 |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 자료: 교육부, 「2015~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2016~2022.; 교육부, 「2007~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7~2015를 그래프로 작성함

## 2. 학교급별 사교육비 변화 추이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학교급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급별로 증가 또는 감소한 시기와 변화 추이에 차이가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에도 학교급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7년에는 10조 2천억 원이었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 사교육비 총액과 증가율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2007년에는 5조 6,120억 원이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도 증가하였고, 2021년에 사교육비 총액과 증가율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7년에는 4조 2,181억 원이었고,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0% 이상씩 크게 증가하였다. 4개 연도에 소폭(-0.1%~-0.9%) 감소했으나 전체 기간 동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도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 사교육비 총액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표 3 |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변화 추이(2007~2021년)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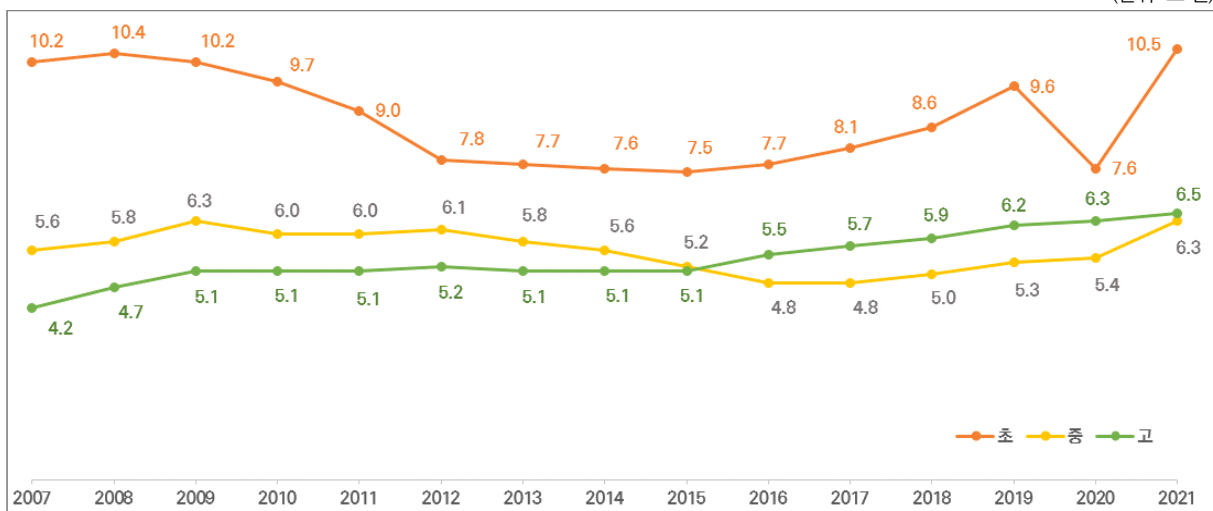
구분	초		중		고	
	사교육비 총액	전년대비 증감률(%)	사교육비 총액	전년대비 증감률(%)	사교육비 총액	전년대비 증감률(%)
2007	102,098		56,120		42,181	
2008	104,307	2.2	58,135	3.6	46,652	10.6
2009	102,309	-1.9	62,656	7.8	51,294	10.0
2010	97,080	-5.1	60,396	-3.6	51,242	-0.1
2011	90,461	-6.8	60,006	-0.6	50,799	-0.9
2012	77,554	-14.3	61,162	1.9	51,679	1.7
2013	77,375	-0.2	57,831	-5.4	50,754	-1.8
2014	75,949	-1.8	55,678	-3.7	50,671	-0.2
2015	75,287	-0.9	52,384	-5.9	50,675	0.0
2016	77,438	2.9	48,102	-8.2	55,065	8.7
2017	81,311	5.0	48,297	0.4	57,095	3.7
2018	85,531	5.2	49,972	3.5	59,348	3.9
2019	95,597	11.8	52,554	5.2	61,819	4.2
2020	76,107	-20.4	53,943	2.6	63,482	2.7
2021	105,279	38.3	63,480	17.7	65,399	3.0

※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2.3.25.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함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교육비 총액이 학교급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한 것보다 많았으나, 2012년까지 중·고교와의 차이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 크게 증가하여 초등학교와 중·고교와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졌다. 또한 중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부터 고등학교보다 낮아졌으나, 2021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의 변화 추이에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그림 9 | 연도별 학교급별 사교육비 지출 현황(2007~2021년)

(단위: 조 원)



### 3. 계층 및 지역 간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 가. 가구소득에 따른 계층별 사교육 지출 격차

가구 소득수준별 최상위와 최하위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2017년에 약 5.2배에서 2018년 약 5.1배, 2019년 약 5.2배, 2020년 약 5.1배, 2021년에 약 5.1배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 최상위 가구와 최하위 가구에서 모두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증가 추세라는 점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장 소득이 높은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에 48.3만 원에서 2019년에 53.9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 52.6만 원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59.3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7년 이전 조사에서는 최상위 가구인 7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감소하였다.

표 4 |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단위: 만 원)

항목	평 균	2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700~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2007	22.2	9.2	5.3	10.7	17.7	24.1	30.3	34.4	38.8	46.8	-	-
2008	23.3	9.3	5.4	10.8	17.7	24.5	30.6	35.6	40.2	47.4	-	-
2009	24.2	9.6	6.1	11.0	18.0	24.6	31.0	37.2	42.0	51.4	-	-
2010	24.0	9.2	6.3	10.3	17.0	24.0	29.8	36.2	40.4	48.4	-	-
2011	24.0	9.8	6.8	10.9	17.4	23.4	29.0	34.0	39.4	44.0	-	-
2012	23.6	9.9	6.8	11.0	16.8	23.0	28.8	33.2	36.7	42.6	-	-
2013	23.9	10.0	6.8	11.1	16.0	22.1	28.0	33.0	35.9	41.5	-	-
2014	24.2	9.4	6.6	10.2	15.9	21.2	27.2	31.9	36.7	42.8	-	-
2015	24.4	9.3	6.6	10.2	15.9	21.2	26.6	31.1	36.1	42.0	-	-
2016	25.6	8.8	5.0	9.8	15.4	21.1	26.5	31.0	36.5	44.3	-	-
2017	27.2	9.3	-	-	15.3	21.2	27.4	32.2	36.5	-	40.7	48.3
2018	29.1	9.9	-	-	15.6	22.2	27.9	32.9	37.3	-	42.2	50.5
2019	32.1	10.4	-	-	17.0	23.4	30.0	35.4	40.4	-	46.4	53.9
2020	30.2	10.3	-	-	15.8	20.4	26.9	32.5	37.2	-	44.1	52.6
2021	36.7	11.6	-	-	18.0	25.3	33.2	38.1	44.4	-	48.6	59.3

※ 주: 1) 2017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사교육비에 포함됨 (2017년 자료 소급 보정하여 수치 변경함/2019.3.)

2) 소득 추세를 반영하여 2017년부터 가구소득 구간 변경(최하: 100만원 미만→200만원 미만, 최고: 700만원 이상→800만원 이상)

※ 자료: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2.3.25.

가장 소득이 낮은 2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에도 2017년에 9.3만 원에서 2019년에 10.4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에 10.3만 원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11.6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7년 이전 조사에서는 최하위 가구인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감소하였다.

## 나. 지역 간 사교육 지출 격차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의 지역규모별 사교육비 총액 지출 격차는 2017년에 약 1.8배에서 2018년 약 1.8배, 2019년 약 1.8배, 2020년 약 1.9배, 2021년에 약 1.7배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모두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증가 추세이며,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 5 | 지역규모별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2007~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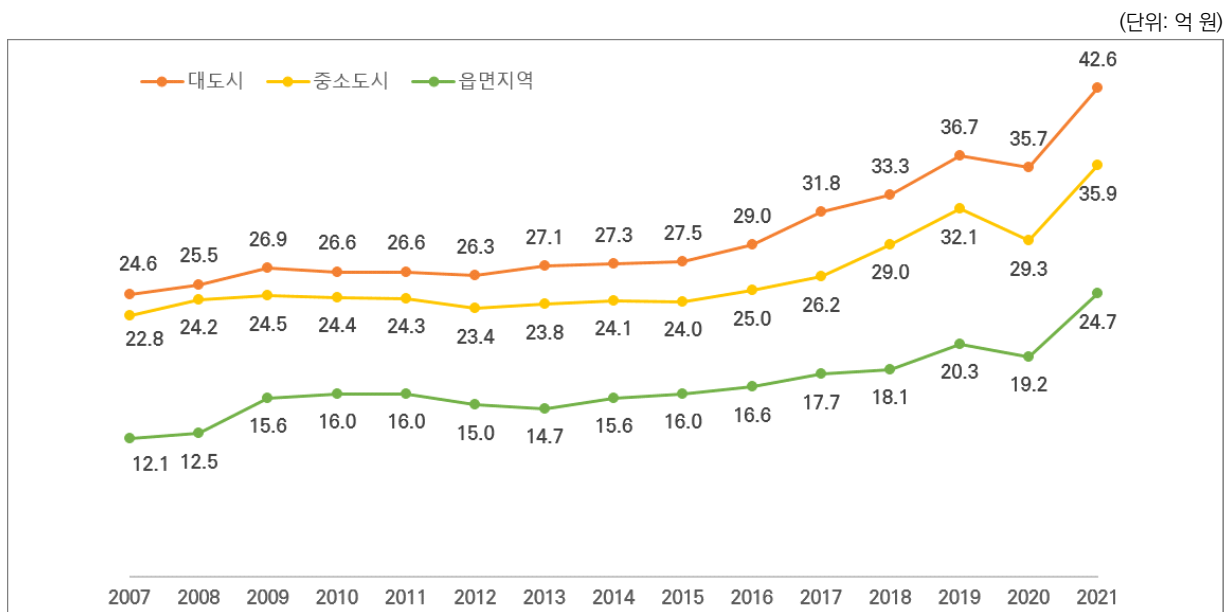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연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대비 읍면지역 비율(A/C)
	사교육비 지출액(A)	전년대비 증감률(%)	사교육비 지출액(B)	전년대비 증감률(%)	사교육비 지출액(C)	전년대비 증감률(%)	
2007	24.6		22.8		12.1		2.0
2008	25.5	3.66	24.2	6.14	12.5	3.31	2.0
2009	26.9	5.49	24.5	1.24	15.6	24.80	1.7
2010	26.6	-1.12	24.4	-0.41	16.0	2.56	1.7
2011	26.6	0.00	24.3	-0.41	16.0	0.00	1.7
2012	26.3	-1.13	23.4	-3.70	15.0	-6.25	1.8
2013	27.1	3.04	23.8	1.71	14.7	-2.00	1.8
2014	27.3	0.74	24.1	1.26	15.6	6.12	1.8
2015	27.5	0.73	24.0	-0.41	16.0	2.56	1.7
2016	29.0	5.45	25.0	4.17	16.6	3.75	1.7
2017	31.8	9.66	26.2	4.80	17.7	6.63	1.8
2018	33.3	4.72	29.0	10.69	18.1	2.26	1.8
2019	36.7	10.21	32.1	10.69	20.3	12.15	1.8
2020	35.7	-2.72	29.3	-8.72	19.2	-5.42	1.9
2021	42.6	19.33	35.9	22.53	24.7	28.65	1.7

※ 주: 대도시 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의미함

※ 자료: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2.3.25.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함

| 그림 10 | 연도별 지역규모별 사교육비 지출 현황(2007~2021년)



※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2.3.25.를 바탕으로 그림으로 제시함

#### 4. 종합 및 시사점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에 사교육비 총액(23.4조 원)이 2020년(19.4조 원)에 비해 크게(21.0%) 증가하였다. 전체학생 및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증가하였다. 초·중·고교 사교육 참여율도 2021년에 75.5%로 2020년에 비해 8.4%p 증가하였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도 증가하였다. 사교육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2021년에 사교육비 총액, 1인당 월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시간은 2020년에 비해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사교육비 총액(38.3% 증가), 1인당 월 사교육비(39.4% 증가),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 사교육비(18.5% 증가), 사교육 참여율(12.3%p 증가),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2.2시간 증가)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사교육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였다.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21년뿐만 아니라 2019년에도 급증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넷째,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감소하였으며, 연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하였다.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시기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였으며, 중학교 사교육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사교육비 총액 또는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한 시기가 있으며, 이 시기의 감소 원인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친 정부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가구소득별 및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2017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에 가구소득 최상위 가구와 최하위 가구의 사교육비 격차는 약 5.1배이며,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사교육비 총액 지출 격차는 약 1.7배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가구소득 최상위 가구와 최하위 가구의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 추세이고, 2016년부터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 추세이다. 이는 소위 입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나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계층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 IV. 주요 쟁점

### 1.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사교육비 총액이 계속 증가하였고,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28.8만 원)부터 2019년(42.9만 원)까지 12년째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초·중·고교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이 우선적인 문제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학부모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교육여론조사(이하 “교육여론조사”라 한다) 2020년 조사<sup>4)</sup>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 학부모들은 “자녀 사교육비의 부담 정도”라는 질문에 대해 94.3%가 부담된다(매우 부담된다 51.3%, 다소 부담된다 43.0%)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의 94.5%와 유사하나, 2018년의 91.1%에 비해 증가하였다.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사교육 참여율도 2016년(67.8%)부터 2019년(74.8%)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초·중·고교 학부모에게 자녀

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는 교육여론조사를 통해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교육정책 수립 및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0년 교육여론조사(15차 조사)의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5,000명이며, 전면 웹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연 1회 실시한다(조사 기간: 2020.8. 31(월) ~ 9. 25(금), 약 4주간).



사교육 참여를 유인하는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다. 교육여론조사(2020년) 결과를 보면, “자녀 사교육비의 부담 정도”라는 질문에 대해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초·중·고교 학부모의 응답이 2020년에 1.9%에 불과하고, 이는 2019년(2.3%), 2018년(3.7%)에 비해 더 감소한 비율이다.

“자녀 사교육비의 부담 정도” 조사 항목은 2017년부터 조사 항목에 추가되어 2020년까지 조사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2021년에는 교육여론조사에서 이 항목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sup>5)</sup> 2021년에는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초·중·고교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비의 부담 정도는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 자녀 사교육비의 부담 정도(2017~2020년)

(단위: 명(%))

사교육비 부담 정도	2020		2019		2018		2017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 (0.1)	1 (0.1)	2 (0.2)	2 (0.2)	3 (0.6)	10 (0.8)	3 (0.6)	10 (0.5)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41 (4.0)	44 (3.8)	25 (3.0)	30 (3.1)	23 (4.5)	57 (4.5)	30 (6.3)	97 (4.9)
다소 부담된다	434 (41.9)	504 (43.0)	314 (37.7)	368 (38.0)	183 (36.0)	405 (31.7)	177 (37.2)	636 (31.8)
매우 부담된다	544 (52.5)	602 (51.3)	473 (56.8)	549 (56.7)	280 (55.1)	724 (56.7)	255 (53.6)	1,082 (54.1)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	17 (1.6)	22 (1.9)	19 (2.3)	20 (2.1)	19 (3.7)	81 (6.3)	11 (2.3)	175 (8.8)
계	1,037 (100)	1,173 (100)	833 (100)	969 (100)	508 (100)	1,277 (100)	476 (100)	2,000 (100)

※ 주: 2020년 조사가 가장 최근 자료이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21』에서는 이 항목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7, 2018, 2019, 2020.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위 입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나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계층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심리·정서적인 측면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여론조사(2021년) 결과를 보면,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라는 질문에 대해 초·중·고교 학부모의 21.8%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20.0%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8.4%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 3가지 응답을 합한 비율은 60.2%이다. 이는 사교육을 시키는 원인에 심리적 불안과 다른 학생과의 경쟁 심리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2021년 조사 항목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은 “2020년부터 ‘사교육 비용 부담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의견’ 조사 항목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조사 문항의 중복성,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의 대응 등에 대한 유동 문항 개발에 따른 전체 문항 조정 등으로 일부 문항이 수정되었다”라고 답변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 3가지 응답을 합한 비율은 2017년에 61.6%, 2018년에 60.1%, 2019년에 58.8%, 2020년에 64.1%로 평균 61.2%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위와 같은 학부모들의 심리가 유지되는 한 사교육비는 감소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up>6)</sup>

표 7 |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1999년, 2001년, 2017~2021년)

(단위: 명(%))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	2021		2020		2019		2018		2017		2001		1999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219 (18.5)	979 (14.8)	266 (15.3)	1,132 (13.5)	277 (17.9)	1,103 (14.8)	163 (16.3)	584 (14.8)	157 (17.7)	592 (15.9)	<b>134</b> <b>(31.7)</b>	316 (24.9)	<b>174</b> <b>(28.0)</b>	339 (22.5)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237 (20.0)	1,275 (19.2)	319 (18.4)	1,440 (17.2)	270 (17.4)	1,310 (17.6)	126 (12.6)	567 (14.4)	133 (15.0)	547 (14.7)	93 (22.0)	333 (26.3)	140 (22.5)	337 (22.4)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218 (18.4)	1,549 (23.4)	387 (22.3)	2,133 (25.4)	317 (20.5)	<b>1,832</b> <b>(24.6)</b>	217 (21.7)	935 (23.7)	198 (22.3)	897 (24.1)	-	-	-	-
<b>남들이 하나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b>	<b>258</b> <b>(21.8)</b>	<b>1,613</b> <b>(24.3)</b>	<b>407</b> <b>(23.4)</b>	<b>2,214</b> <b>(26.4)</b>	<b>324</b> <b>(20.9)</b>	1,740 (23.3)	<b>257</b> <b>(25.8)</b>	<b>1,049</b> <b>(26.6)</b>	<b>215</b> <b>(24.3)</b>	<b>1,013</b> <b>(27.2)</b>	100 (23.6)	<b>386</b> <b>(30.5)</b>	<b>149</b> <b>(24.0)</b>	<b>512</b> <b>(34.0)</b>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88 (7.4)	431 (6.5)	125 (7.2)	495 (5.9)	99 (6.4)	446 (6.0)	61 (6.1)	195 (4.9)	67 (7.6)	198 (5.3)	46 (10.9)	104 (8.2)	110 (17.7)	235 (15.6)
방과후 집에서 공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86 (7.3)	439 (6.6)	102 (5.9)	537 (6.4)	122 (7.9)	600 (8.1)	86 (8.6)	324 (8.2)	62 (7.0)	267 (7.2)	24 (5.7)	57 (4.5)	48 (7.7)	84 (5.6)
자녀가 혼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74 (6.3)	332 (5.0)	128 (7.4)	415 (4.9)	129 (8.3)	398 (5.3)	81 (8.1)	273 (6.9)	50 (5.6)	198 (5.3)	24 (5.7)	62 (4.9)	-	-
기타	4 (0.3)	12 (0.2)	4 (0.2)	21 (0.3)	10 (0.6)	23 (0.3)	7 (0.7)	14 (0.4)	4 (0.5)	15 (0.4)	2 (0.5)	9 (0.7)	-	-
계	1,184 (100)	6,630 (100)	1,738 (100)	8,387 (100)	1,548 (100)	7,452 (100)	998 (100)	3,941 (100)	886 (100)	3,727 (100)	423 (100)	1,267 (100)	621 (100)	1,507 (100)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

## 2. 사교육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

이명박 정부는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교육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sup>7)</sup> 이명박 정부는 “교육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고, 주요한 사교육비 정책으로는 「학원비 경감방안」(2008.10.28.),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2009.6.3.),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2011.5.19.), 「2012년 사교육비 경감대책」(2012.2.17.) 등이 있다.

6) 김정근,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 논증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0권 제3호, 2020, pp.159~160.

7)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 「교육실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 -」, 2008.3.20.

| 표 8 |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

사교육비 대책	중점 추진 방안
학원비 경감방안 (2008.10.28.)	학원비 실태조사 실시
	특별 지도 및 행정처분 강화
	학원비 안정화·투명성 제고 시스템 개선
	행정지원 체계 구축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2009.6.3.)	정규수업의 내실화
	학교 다양화 추진
	책무성의 강화
	사교육 수요의 흡수
	입시제도의 선진화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2011.5.19.)	학원 운영 투명성 제고
	교실수업의 근본적인 변화 기반 구축
	학교 중심의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
	방과후학교 질의 획기적 제고
2012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2012.2.17.)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환경구축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사교육 수요 높은 과목 맞춤형 대책
	신규 사교육 유발 우려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의 강화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 -」, 2008.3.20.; 교육과학기술부 국무회의 보고자료, 「사교육 경감 대책」, 2008.10.28.; 교육과학기술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09.6.3.; 교육과학기술부,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2011.5.18.;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2012.2.17.; 김혜자 외,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20.12., pp.126~127. 내용을 재인용함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은 다음과 같다. 초·중·고교 및 대학입학전형 등에서의 선행 학습 유발 행위 금지를 위한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및 시행(2014.3.11. 제정, 2014.9.12. 시행),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2014.12.18.) 등이다.

| 표 9 |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

사교육비 대책	중점 추진 방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4.3.11.)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여건 조성, 궁극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실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2014.12.18.)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대해 집중 대응
	학교급별로 맞춤형 정책 대응 추진
	법적·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범사회적인 사교육 경감 노력의 병행 추진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김혜자 외,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20.12., pp.128~129.의 내용을 종합하고 일부 수정·보완함

문재인 정부는 사교육비 대책을 별도의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안에 ‘사교육비 대응방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교육부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주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선순화 체제 구축”을 목표 수준으로 제시하고, 중점 추진 방안으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고교 서열 구조 해소”, “방과후 활동 강화”, “사교육 대응 점검·관리”,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회, 구조적 영향 완화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과 사교육 증가 대응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방역안전망 하에 학사 운영 정상화, 방과후학교 정상화 및 프로그램 확대, 교과학습 보충 지원 및 대학생 튜터링 확대,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진로·진학지도 내실화, 주요 교육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공교육 내실화” 등이 제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에는 “사교육 의존 대응, 사교육 증가 대응, 사교육 유발 요인 해소, 사교육 등 격차 해소” 등의 용어가 열거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용적인 정책방안을 찾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쟁·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의 변화를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교육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입시컨설팅, 논술 과외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는 주장도 있다.<sup>8)</sup>

그러나 2017년 이후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 사교육비 관련 지표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종합대책 형식의 사교육비 대책이 마련 및 추진되지 못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에 제시된 내용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전의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방과후활동 강화’로 일부 변경되었고, 방과후학교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

8) 김혜자 외,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20.12., p.154.

이 유지되었다. 초등 단계 사교육 수요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고교 서열 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2020년),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안착(2021년), 교과학습 보충 지원 및 대학생 튜터링 확대(2022년) 등의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고교 서열 구조 해소’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표 10 | 문재인 정부의 연도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대응 방안

대책명	중점 추진 방안	주요 내용
2021년 사교육비조 사 결과 및 대응방안 (2022.4)	방역안전망 하에서 학사운영의 정상화	• 학교교육활동의 회복, 학습에 대한 학부모 불안 및 우려 해소를 사교육 의존에 대응
	방과후학교 정상화와 프로그램의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한 등으로 초등학교 예체능 등 보충 수요에 대한 사교육 의존에 대응
	교과학습 보충 지원과 대학생 튜터링의 확대	• 초·중학교의 전 교과 사교육비 증가에 대응
	기초학력 국가 책임지도의 강화	• 원격 수업,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학교 지원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초학력의 저하 우려를 해소
	학생 통합지원체제의 구축 등 교육격차 해소 추진	• 가구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지속 발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지원체제의 구축과 취약계층 대상 지원의 확대
	인공지능(AI) 기반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의 확충	• 코로나19의 장기화, 온라인 사교육시장의 확대 등 상황에서 유료 인터넷·통신강좌 유형의 사교육 선호 및 수요 증가에 대응
2020년 사교육비조 사 결과 및 대응방안 (2021.4)	기초학력·자기주도학습 지원 강화	•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등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환경의 제공
	고등학생 학습보충 및 심화 수요 대응	• 철저한 방역하에 고등학교에서의 교과학습과 학습보충·심화, 진학 준비 등 지원 • EBS 교육자료(콘텐츠) 활용 학습 지원
	입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진로·진학 지도의 내실화	•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의 안착, 영재학교 및 과학고 입학전형의 개선을 통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계의 사교육 유발 요인을 해소 • 학생 맞춤형 진로 및 진학 지도로 진로-진학 학습상담 목적의 사교육 수요를 완화
	교육격차 해소 지원 강화	•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양극화의 완화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
	잠재적 사교육 유발 요인 선제적 대응	• 방과후학교의 정상화 및 돌봄의 확대 • 사교육기관 대상 관리·감독의 강화
	주요 교육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공교육 내실화	• 공교육의 내실화 위한 「2021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2021.1.)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2.)의 정책 추진 •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사교육 인식의 개선 노력 지속 •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사교육 격차-학력 격차-임금 격차’ 등 사회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
2019년 사교육비조 사 결과 및 대응방안 (2020.4)	공교육의 내실화	• 과정중심의 평가로 전환 •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의 현장 안착을 지원 • EBS Math, Ask Math 등을 활성화하여 수학 학습방법을 제공 • 예술·체육 교육활동 수요의 공교육 흡수 • 학교 진로교육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의 조성</li> <li>미래교육 수요에 맞는 학교 공간의 혁신</li> </ul>
	초등 단계의 사교육 수요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li> <li>「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의 안착</li> <li>고교 서열 구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li> </ul>
	대입제도 단순화 및 공정성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현장 안착</li> <li>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기반의 조성</li> </ul>
	방과후 활동 강화와 학원비의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활성화</li> <li>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점검 및 관리 강화</li> </ul>
	사교육 대응 점검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교육청의 사교육 대응 책무성의 제고</li> </ul>
	사회 인식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교육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영향에 대한 완화 노력</li> <li>미래사회 인재상과 자녀교육의 인식 제고</li> </ul>
2018년 사교육비조 사 결과 및 대응방안 (2019.4)	대입개편방안의 안정적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의 안정적 추진</li> <li>대입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단순화의 지속적인 추진</li> </ul>
	공교육의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의 활 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가 근본적으로 사교육을 경감 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원칙 아래 학교교육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li> <li>「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의 수립</li> <li>지역사회와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의 활성화</li> </ul>
	학원비 안정화 및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원비 안정화의 지속 추진</li> <li>초등돌봄교실의 지속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li> </ul>
	사회구조적 영향의 완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구조적 요인(저출산 기초, 학력별 임금 격차 등)도 사교육 증가 와 관련된 현상으로 보고, 사회구조적 영향의 완화를 위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강화</li> </ul>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체계적인 사 교육 점검·조사 실시 및 정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지역 여건별로 맞춤형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li> <li>사교육비 통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li> </ul>
2017년 사교육비조 사 결과 및 대응방안 (2018.4)	쉽고 재미있는 교과교육 및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 영역 사교육 의존도를 경감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대해 정확한 안내 및 홍보 강화</li> <li>학생 활동중심으로 개선, 과정중심평가 강화</li> </ul>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예술 및 체육활 동 기획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증가에 대응</li> </ul>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및 · 초등돌봄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 수가 적은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지출 증가, 저출산 시대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와 보육 및 친구 사귀기 목적 사교 육 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의 강화, 지역사회 연계 초등 돌봄 서비스의 확대</li> </ul>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입 동시 실시 및 향후 고교 체제 개편 등을 통해 고교 서열화로 인 한 고입 경쟁 완화, 자사고 등 진학 준비 사교육 부담의 지속적인 해 소</li> <li>학생·학부모의 진로 및 진학 관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교육 내의 진로·진학상담 확대 및 내실화의 추진</li> </ul>
	교육의 계층사다리 복원 노력과 학원 비의 인상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BS 강의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감안하여 검·인정 출판사 교과 서 기반 강의의 확대·개발 계획</li> <li>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취약 계층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해 교육 의 계층사다리 복원 노력 지속</li> <li>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학원비의 인상도 사교육비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학원비의 지도·점검을 강화</li> <li>교실과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및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의 구축</li> </ul>

※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사교육비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각 연도



### 3.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심화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코로나19 이전의 교육여론조사(2019년) 결과를 보면,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라는 질문에 대해 ‘심화되었다’는 학부모의 응답(매우 심화 + 다소 심화)이 2017년에 21.2%에서 2018년에 32.1%, 2019년에 46.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 2~3년 전과 비교한 사교육 실태 변화에 대한 인식(1999~2001년, 2017~2020년)

사교육 실태 변화	2020		2019		2018		2017		2001		1999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매우 줄어들었다	5 (0.5)	18 (0.4)	3 (0.4)	26 (0.7)	16 (3.1)	49 (2.5)	8 (1.7)	20 (1.0)	3 (0.7)	9 (0.7)	19 (3.0)	42 (2.8)
다소 줄어들었다	70 (6.8)	254 (5.1)	41 (4.9)	202 (5.1)	67 (13.2)	411 (10.6)	65 (13.7)	209 (10.5)	42 (9.9)	145 (11.4)	171 (27.4)	404 (26.8)
별다른 변화가 없다	480 (46.3)	2,590 (51.8)	404 (48.5)	2,076 (51.9)	262 (51.6)	1,154 (57.7)	302 (63.4)	1,276 (63.8)	122 (28.8)	360 (28.4)	298 (47.8)	715 (47.4)
다소 심화되었다	363 (35.0)	1,603 (32.1)	265 (31.8)	1,234 (30.9)	109 (21.5)	398 (19.9)	62 (13.0)	313 (15.7)	112 (26.5)	342 (27.0)	92 (14.8)	242 (16.0)
매우 심화되었다	119 (11.5)	535 (10.7)	120 (14.4)	462 (11.6)	54 (10.6)	188 (9.4)	39 (8.2)	182 (9.1)	137 (32.4)	351 (27.7)	43 (6.9)	106 (7.0)
잘 모르겠다 (2001 이후 제외)	-	-	-	-	-	-	-	-	7 (1.7)	60 (4.7)	-	-
계	1,037 (100.0)	5,000 (100.0)	833 (100.0)	4,000 (100.0)	508 (100.0)	2,000 (100.0)	476 (100.0)	2,000 (100.0)	423 (100.0)	1,267 (100.0)	623 (100.0)	1,509 (100.0)

※ 주: 2020년 조사가 가장 최근 자료이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2021』에서는 이 항목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0.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EBS 강의를 활용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달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제안되었다.<sup>9)</sup> 또한 학생 참여를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EBS 강의를 포함하여 원격수업으로 개발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중간·기말고사 및 수능시험에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EBS 강의는 수능시험에 최대 80% 이내에서 연계되어 왔고, 현직교사도 강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의 이용 경험이 많고, 강의 콘텐츠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업 활용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고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9) 이덕남, 유지연,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 『이슈와 논점』 제169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4.2.



그리고 정부가 초·중·고교 학생·학부모의 학원 등에 대한 의존 심화를 해소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입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sup>10)</sup> 학원 등에 대한 선행교육 직접 규제 외에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교육 내실화에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할 것도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도 선제적으로 사교육비 해소 등에 대해 문제 지적 및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미흡했다.

#### 4.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 변화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정시와 수시 모집 비율, EBS 수능 연계 여부 및 비율, 수시 모집 중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 수능시험 절대평가 도입 교과, 고교 학생 평가(내신)의 방법 등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교과 중심 운영 여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의 교육정책도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친다.<sup>11)</sup>

교육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09년 6월 3일에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교육정책의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 고교입시 중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국제화 특성화 중학교(소위 ‘국제중’으로 불리고 있음) 등의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대한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가 2011년에 실시되었다.<sup>12)</sup> 그리고 2011학년도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 2014년에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중·고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해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가 법제화되었다.<sup>13)</sup> 중·고교 중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 대상 학교

10) 이덕난,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5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11) 김정근,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 논증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0권 제3호, 2020, pp.139~179; 안선희,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의 추진과정과 정책문제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4권 제6호, 2018, pp.87~116.

12)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매뉴얼」, 2010.1.26.

1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현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는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자사고, 자율학교 중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이다.<sup>14)</sup>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 등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행 출제 및 평가 금지 위반 행위, 초·중·고교의 선행교육 및 선행 출제·평가 금지 위반 행위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선행교육규제법」이 연초부터 시행된 2015년 이후 사교육비는 증가하였고 2018년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해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그러므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교육비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EBS 수능 연계(25.7%)를 1순위로 꼽았으며, 이러한 응답 경향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EBS 강의(14.6%), 대입전형 단순화(13.1%), 선행학습 금지 정책(11.8%),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11.7%) 등의 순으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6)</sup>

그리고 초·중·고교 학부모들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큰 정책으로 EBS 수능 연계(25.5%)를 1순위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대입전형 단순화(15.5%), 선행학습 금지 정책(14.1%), EBS 강의(12.6%),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10.9%) 등의 순으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고교체제 단순화(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축소 또는 폐지 등), 영어 수능시험 절대평가 도입 등도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
-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야영, 모듬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5) 이덕남,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5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pp.81~82

16)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 2021, p.183

| 표 12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2021년)

구분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전체 응답자
1순위	EBS 수능 연계(25.5%)	EBS 수능 연계(25.7%)
2순위	대입전형 단순화(15.5%)	EBS 강의(14.6%)
3순위	선행학습 금지 정책(14.1%)	대입전형 단순화(13.1%)
4순위	EBS 강의(12.6%)	선행학습 금지 정책(11.8%)
5순위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10.9%)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11.7%)
6순위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9.1%)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9.9%)
7순위	고교체제 단순화(6.6%)	고교체제 단순화(7.1%)
8순위	수능(영어, 한국사 등) 절대평가(4.8%)	수능(영어, 한국사 등) 절대평가(5.3%)
9순위	기타(1.1%)	기타(0.8%)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 2021, p.183의 조사결과를 표로 구성하여 제시함

일부에서는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은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대해 고교교육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sup>17)</sup> 이에 대해 교육부는 EBS 수능 연계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1학년도 수능 이후 70%를 유지하던 EBS 연계율은 2018년 대입개편 공론화 이후 5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2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2019.8.12. 발표)에 반영되었고,<sup>18)</sup> 올해 실시되는 수능에서도 EBS 연계율을 50%로 유지하여 출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sup>19)</sup>

또한 일부에서는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대입제도를 마련 및 유지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교육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대학들은 해마다 입학전형을 변경하고 있으며, 입학전형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학생·학부모 등 현장에서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학입시의 원칙을 마련하여 입시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시와 정시 비율은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 안정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sup>21)</sup>

17) 정순원, 「헌법상 공교육원칙에 따른 EBS 수능강의 정책의 정당성」, 『한국교육』 제38권 제1호, 2011, pp.211~230.; 임종헌·김병찬, 「EBS 수능연계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학연구』 제52권 제3호, 2014, pp.175~203.; 조익수, 「수능 EBS 연계 ‘유지’.. ‘혼란 차단해야」, 『베리타스 알파』, 2015.3.1.

18) 교육부 보도자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2019.8.12.; 동아일보, 「고1 수능부터 국어·수학 선택과목 도입…EBS연계 50%로 축소」, 2019.8.12.

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2022.3.22.; JTBC, 「올해 수능도 문·이과 통합형으로…EBS 연계율 50% 유지」, 2022.3.22.

20) 정제영, 「사교육비 급증, 교육혁신의 기회로」, 『헤럴드경제』, 2022.3.24.

21) 신현석, 윤지희, 「시스템 사고에 의한 사교육비 증가 현상 분석: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제27집 제4호, 2020, pp.115~116

이를 종합하면, 적어도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학부모 및 국민, 학계 등이 동의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교육정책은 각각 나름대로의 정책 목표가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에만 초점을 맞춰서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

그러나 사교육비 급증 추세와 사교육비 증가에 심리적·정서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한 정책을 재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 결정 시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 V. 개선과제

### 1. 사교육비 급증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시급

정부는 사교육비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단기간에 사교육비가 감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수년 동안 감소하던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부터 증가하고,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7.8%(2019년), 21.0%(2021년)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물론이고 유관 부처와 시·도교육청, 학교, 교원 등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될 수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의 사교육비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첫 대책 마련 1년 후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속으로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하였다. 사교육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대책만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으나, 종합대책이 사교육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확인되었다.

차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교육부를 포함한 유관 부처와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될 시·도교육감,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등도 사교육비 경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일선 학교와 교원들의 역량과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사교육 의존도가 커지는 현실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경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마련

중인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2. 초등학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 · 입법 추진

정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만족도 제고 등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사교육비 총액(38.3% 증가), 1인당 월 사교육비(39.4% 증가),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 사교육비(18.5% 증가), 사교육 참여율(12.3%p 증가),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2.2시간 증가)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맞춤형 대책을 찾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원인에는 심리적 불안과 다른 학생과의 경쟁 심리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추진, 2025년 자사고 및 외고 · 국제고 폐지 예정,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 비율 확대 등 대입제도의 급격한 개편, 변화될 제도 속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확대로 인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감소하였고, 교육의 질 저하 및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sup>23)</sup>

이러한 심리적 불안과 경쟁 심리를 완화시키기 위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초등 방과후 돌봄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봄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학교에 교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직교원 담당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연간 10.4조 원에서 7.8조 원으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8.1조 원에서 10.5조 원으로 급증하였다. 초등학교 사교육비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만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으나,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적어도 초등학교 사교육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대선공약 중 ‘우리아이’에는 ‘03.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해 초등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돌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겠습니다’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약속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부모 부담 대폭 경감”(p.141) 등이 제시되어 있다.

22) 권수진, 사교육만 웃는 ‘불통’ 교육정책.. ‘공교육강화로 전환해야’, 『베리타스 알파』, 2018.1.29.

23) 김제림, “원격수업 못민겠다”...아이들 학원수업 확 늘어, 『매일경제』, 2022.2.3.



초등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이 종료된 이후 초등돌봄으로 넘어가기 중간단계의 활동이며, 초등돌봄에 비해 교육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므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학부모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어렵다. 사교육으로 향하는 학생·학부모의 시간을 학교로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교육 관련 강좌 확대 및 현직교원 담당 프로그램 확대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선공약에 제시된 ‘초등전일제 교육 실시 및 초등돌봄 시간 확대’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방과후학교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sup>24)</sup>에 방과후학교 과정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방과후학교의 정의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1. 기본사항’에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방과후학교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이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설 및 현직 교원의 참여 지원, 교원 외의 종사자 등 운용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입법을 포함한 초등학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고, 교육부의 차기 정부 업무계획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3.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인 교육정책의 적용

어떤 교육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연

2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6., 2020. 10. 2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법률 제16300호(2019. 3.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구에 따라 서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도 상당하다.<sup>25)</sup> 그러나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심리·정서적 영향이 크다는 점도 앞서 설명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 전체 또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는 교육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교육비가 감소 추세에 있었던 시기에 적용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은 EBS 수능 연계 정책의 경우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시기에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9년에 고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종전의 수능시험 70~80% 수준 반영에서 50% 수준 반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공교롭게도 2019년과 2021년에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EBS 강의, 대입전형 단순화, 선행교육 규제 정책,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등이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부모들은 고교체제 단순화(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축소 또는 폐지 등), 영어 수능시험 절대평가 도입 등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인식 조사 결과만으로 해당 교육정책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적어도 사교육비 변화 추이와 국민·학부모의 인식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교육부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교육정책의 적용 여부 및 변경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 및 적용이 요구된다. 이는 다른 학생과의 경쟁을 위한 무분별한 사교육비 지출 확대와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계층간 교육격차를 방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4.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유발 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교 및 대학 입학전형 등에 대해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향평가는 고교 및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행 출제 및 평가 금지 위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과적으로도 금지 위반 행위 감소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찾기 어려웠다.

25) 김정근,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 논증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0권 제3호, 2020, pp.145~148



「선행교육규제법」의 제정 이유에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은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목적에도 어긋나며,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선행교육규제법」의 입법 목적에는 사교육비 경감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sup>26)</sup>

이에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선행교육규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선행교육규제법」 제9조는 초·중·고교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는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0조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는 대학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선행교육규제법」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개정하여 “입학전형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당 학교 및 대학의 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행교육규제법」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 및 대학 입학전형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에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6) 이덕난,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5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pp.4-7.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 국무회의 보고자료, 「사교육 경감 대책」, 2008.10.28.
- \*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 -」, 2008.3.20.
- \*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2012.2.17.
-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매뉴얼」, 2010.1.26.
- \* 교육과학기술부,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2011.5.18.
- \* 교육과학기술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09.6.3.
- \* 교육부 보도자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2019.8.12.
- \* 교육부 보도자료, 「사교육비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각 연도(2017~2022)
- \* 교육부, 「2007~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 각 연도(2007~2015).
- \* 교육부, 「2015~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각 연도(2016~2022.)
- \*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2.3.25.
- \* 권수진, 사교육만 웃는 ‘불통’ 교육정책.. ‘공교육강화로 전환해야」, 『베리타스 알파』, 2018.1.29.
- \* 김정근,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 논증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0권 제3호, 2020
- \* 김제림, 「“원격수업 못믿겠다”...아이들 학원수업 확 늘어」, 『매일경제』, 2022.2.3.
- \* 김지현, 「코로나 탓 더 커진 ‘사교육 의존’...“학원 간 아이 위치 실시간 확인”」, 『헤럴드경제』, 2021.2.12.
- \* 김혜자 외,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20
- \* 동아일보, 「고1 수능부터 국어·수학 선택과목 도입...EBS연계 50%로 축소」, 2019.8.12.
- \*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사상 초유 1인당 사교육비 폭증”: 사교육 경감 대책 전무한 문재인 정부의 예견된 참사...」, 2019.3.12.
- \* 신현석, 윤지희, 「시스템 사고에 의한 사교육비 증가 현상 분석: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제27집 제4호, 2020.
- \* 안선희, 「학생부 중심 대입제도의 추진과정과 정책문제 분석」, 『교육문화연구』 제24권 제6호, 2018.
- \* 이덕난,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5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 \* 이덕난, 유지연,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 『이슈와 논점』 제1696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4.2.

- \* 이도연, 「학부모 76.8%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의존 커져”」, 『연합뉴스』, 2021.10.4.
- \* 임종헌·김병찬, 「EBS 수능연계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학연구』 제52권 제3호, 2014.
- \* 정순원, 「헌법상 공교육원칙에 따른 EBS 수능강의 정책의 정당성」, 『한국교육』 제38권 제1호, 2011.
- \* 정제영, 「사교육비 급증, 교육혁신의 기회로」, 『헤럴드경제』, 2022.3.24.
- \* 조익수, 「수능 EBS 연계 ‘유지’.. ‘혼란 차단해야」, 『베리타스 알파』, 2015.3.1.
- \*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2.3.11.
- \* 통계청·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각 연도
-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각 연도(2017~2021)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2022.3.22.
- \* JTBC, 「올해 수능도 문·이과 통합형으로…EBS 연계율 50% 유지」, 2022.3.22.

## R E P O R T · L I S T

##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246호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	2022.04.06.	김주경 김경민
제245호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	2022.03.10.	허민숙
제244호	미일안보협력 사례로 본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정책	2022.03.08.	김도희
제243호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과 입법개선과제	2022.02.28.	김선화 박혜림
제242호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2022.02.22.	허민숙
제241호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가해자 GPS 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2022.1.28.	허민숙
제240호	도심지 기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2022.1.13.	김진수
제239호	영국과 일본의 법안사전심사제 현황과 시사점	2021.12.31.	최정인 김유정
제238호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 개선과제	2021.12.31.	박재영
제237호	디지털 시대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	2021.12.31.	최정민
제236호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①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개관	2021.12.31.	김도희
제235호	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1.12.30.	조인식
제234호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	2021.12.30.	임재범
제232호	과학기술분야 계획조정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2021.12.29.	권성훈 김나정
제231호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2021.12.28.	전윤정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230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분석	2021.12.23.	김도희
제229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2021.12.22.	류영아
제228호	형사사법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과제	2021.12.21.	김광현
제227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2021.12.15.	이재영
제226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2021.12.13.	문심명
제225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2021.12.10.	하혜영
제224호	유럽 차별금지법제와 시사점	2021.11.24.	김선화
제223호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	2021.11.18.	허민숙
제222호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1.11.17.	박선권
제221호	해외주요국의 워드코로나(With Corona) 시행 전후의 양태와 한국에의 시사점	2021.11.16.	박상윤
제220호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2021.11.10.	김진태
제219호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소방안전 강화방안	2021.11.8.	배재현 김예성
제218호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21.11.3.	황인욱
제217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2021.11.2.	박진우
제216호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1.11.1.	김강산
제215호	육아 패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2021.10.29.	허민숙
제214호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2021.10.26.	김준현 박인환
제213호	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의 현황 및 쟁점사항	2021.10.22.	박혜림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212호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21.10.19.	김광현
제211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배제에 관한 입법 쟁점	2021.10.5.	김성호
제210호	농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및 향후 과제	2021.10.1.	김규호 유재국 장영주
제209호	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2021.9.30.	류호연
제208호	경제위기 시 산업구조개혁 정책의 경과와 시사점	2021.9.17.	전은경
제207호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1.8.26.	박인환
제206호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2021.8.5.	이승현 이승열 김도희
제205호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2021.7.6.	김광현
제204호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2021.6.29.	조인식
제203호	ABC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21.6.22.	김여라
제202호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입법·정책과제 -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2021.6.4.	이수환
제201호	COVID-19 피해기업 손실보상을 위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	2021.5.20.	박충렬
제200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2021.5.11.	박진우 허민숙
제199호	바이든 시기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	2021.5.3.	김도희 박명희 정민정
제198호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 현황과 개선과제	2021.4.30.	장영주 김경민 편지은



**NARS** 현안분석 제247호

##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02-6788-4510

이 보고서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35040-001620-14

ISSN 2586-565X

